



변호사 59명, 헌법재판소 향하는 사연

“공익활동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

지난 11월 23일 헌법소원 제기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것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양심의 영역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 이울 변호사 등 59명은 오는 23일 ‘변호사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27조는 변호사에게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활동 내용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지정한 업무 등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개업 2년 이상 된 만 60세 미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을 정하고 있다.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소속 지방변회에 시간당 3만원씩 법률원조지원비를 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59명의 변호사들은 이 같은 내용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데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 유사 직종은 이 같은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국가 지원을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한 변호사들이 사회에 나와 환원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공익활동 허위 신고나 법률원조지원비의 용처도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 변호사 59명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변호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은 더욱 장려돼야 하나, 소신껏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적극 발굴해 상을 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지난 9월 발의되기도 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했다. 금 의원은 최근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사위크 인용)

법무매거진



‘日강제징용’ 피해자 첫 승소… 한·일 관계 냉각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10월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간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후 11월29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소송과 여자정신근로대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 법원의 판단은 보

다 공고해졌다. 하급심 유사 소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기도 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며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고, 우리 정부도 일부 맞대응하는 등 양국 관계에 냉기류가 심화하고 있다.

일본 기업 측에서는 사실상 위자료 지급 거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또 위자료 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

(뉴시스 인용)

법무매거진

노무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43명 이념성향은?



중앙일보가 역대 대법관 별 이념 성향을 분석한 결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12명)의 판결 성향이 진보·보수 양쪽으로 가장 폭이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적 성향을 드러낸 대법관도 많았고, 반대로 강한 보수적 목소리를 판결문에 담은 대법관도 많았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가운데에선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은 박정화(53·연수원 20기)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다.

1. 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진보 갈라져, 이명박은 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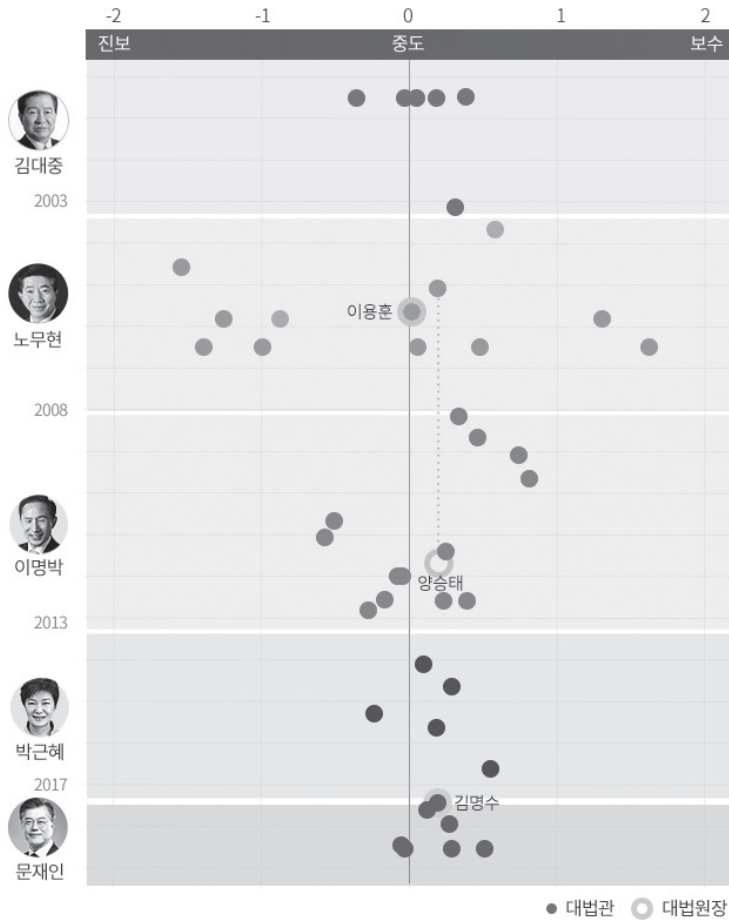
본지는 지난 두 달간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9월 임명된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부터 현재까지 재직했던 대법관 43명의 이념 성향을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연구팀 '폴랩(POLLAB)'과 함께 분석했다. (https://joongang.joins.com/special/2018/1120_judge/) 지난 13년간 전원합의체 판결(총 237개)을 전수 분석, 소수 의견을 많이 낸 판사일수록 성향 점수가 커지는 '다자간 상대적 위치 분석'을 사용했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소수 의견을 많이 낼수록 마이너스(-) 값이 나오도록 설계했다. 소수 의견을 많이 냈으면 '진보', 다수 쪽에 많이 섰으면 '보수'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진보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

2.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가장 진보 성향으로 나타나

분석 결과 대법관 재직 시절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김영란(-1.55) 전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조사됐다. 첫 여성 대법관인 그는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혈값 발행 사건 상고심에서 6(무죄) 대 5(유죄)로 무죄를 선고했을 때 유죄 취지의 소수의견에 섰다. 퇴임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김 전 대법관뿐 아니라 전수안(-1.4)·박시환(-1.27)·이홍훈(-1)·김지형(-0.89) 등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독수리 5형제'



로 불렸던 대법관들 모두 통계적으로도 진보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수리 5형제의 대척점에는 안대희(1.63)·김황식(1.3) 전 대법관이 위치했다. 두 사람 모두 대법관 퇴임 후 새누리당에 몸담은 공통점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13명)들은 보수와 진보가 각각 7명, 6명으로 나타났다. 이상훈(-0.58)·이인복(-0.51) 전 대법관은 물론 지난 2일 퇴임한 김소영(-0.29) 전 대법관까지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대통령 시절과 달리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판사들도 상당히 줄었다. 고영한(0.23)·박병대(0.25)·차한성(0.33) 등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은 모두 중도에 수렴하는 약한 보수 성향을 보였다. 이들 모두 현재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도진보 성향의 박상옥(-0.24) 대법관을 제외하곤 전부 보수적 판사를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기 도중 파면돼 임명한 대법관이 5명에 불과했다. 문

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중엔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은 박정화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다. 풀랩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대법관들은 상대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념성향 값이 아직 확정적인 상태는 아니다.

3. 대법원장 3명 모두 중간값 근처에 위치

이용훈(0.02), 양승태(0.19), 김명수(0.12) 등 전직 대법원장 3명은 모두 극히 중도에 가까운 보수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가장 마지막에 자기 의견을 표명한다. 한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6대 6으로 의견 갈리고 나서 대법원장이 ‘크로스보터’ 역할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용훈·양승태·김명수 등 전·현직 대법원장 3명은 모두 중도에 가까운 보수값을 띠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용훈·양승태·김명수 등 전·현직 대법원장 3명은 모두 중도에 가까운 보수값을 띠었다.

한규섭 교수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낸 판사는 마이너스 값이 크게 뛰지만, 다수 의견을 주로 냈던 판사는 자신의 이념 값에 큰 변동이 없게 된다.”며 “대법원장은 소수 의견을 내는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0에 가까운 보수 값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일선 법원장, 판사 추천받아 임명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28일까지 3인 내외의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의정부·대구지법 소속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을 추천하면 된다. 안 처장은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보다 책임자로 판단되는 법관이 있다면 다른 법원 소속 법관이어도 무방하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6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전체 판사회회에서 하거나,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의견수렴을 통한 방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행정이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후보 추천과 대법원장의 낙점 과정에서 지나친 비방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안 처장은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조선인보 인용)

법무매거진

판사회의 의결기구화에 “다수결이 능사 아니다.” 판사들 반대 목소리도



-사법발전위, 자문기구에서 격상 건의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가 법원 내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보자며 일선 법원 판사회의(소속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법원 내부 반응은 찬반이 엇갈린다. 특히 판사회의를 심의·의결 기구로까지 격상하는 방안을 놓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는 “판사회의 위상을 종전의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법원조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판사회의는 판사 정원이 10인 이상인 지원에서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다. 법원장이 소집하거나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열린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회의를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법발전위는 “대법원장에서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의사결정 방식과 이들에게 집중된 사법행정으로 인해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사법부 민주화가 저해됐다”며 판사회의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 판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에서 벗어난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전체 판사가 다 참여하는 판사회의를 통해 그 문제를 풀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특정 안건을 무조건 심의·의결 한다고 해서 모두 만족할만한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같은 논란이 똑같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법관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의결하자, 법원 내 진보 성향을 띤 특정 모임이 법관대표회의를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법행정을 사실상 다수결(판사회의 의결)에 의존하다 보면 법원이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숫자 논리’에 빠지다 보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판사들의 격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지금의 판사회의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며 ‘그렇잖아도 쏟아지는 사건 배당으로 격무에 시달리는데,

판사회의를 심의·의결기구화 해 모든 의사결정과 행정사안을 일일이 의결하자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판사회의 활성화를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지방법원 소속의 한 판사는 “업무에 부담이 가거나 의결과정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법농단과 같은 참담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판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270개 문화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쉽게 바꾼다



- ‘수결(手決)’은 ‘서명’, ‘헤르니아(hernia)’는 ‘탈장’으로 개정 필요



1.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12월 7일 더 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대상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2. 이번 정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제처,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재청과 법률 분야, 국어 분야 및 문화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3. 이 날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 개정 협의 완료 주요 사례 〉

-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
⇒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
-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
⇒ 낙관(落款)이나 서명(署名)이 없는 편지류
-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 뇌머리뼈 부상으로 탈장이 있는 자
- 유하거리(流下距離)
⇒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流下距離)

4.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1)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 (2) 해당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5.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법령이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매거진



김기영 헌법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참석

법조인 동정



헌법재판소 김기영 재판관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현지기준) 멕시코 키타나로오주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 제2차 총회에 제1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전세계 39개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기관과 24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 김기영 재판관은 세계선거재판회의의 활동 경과 및 성과를 발표하고, 총회 및 실무 회의에서 실질적 정치참여의 평등보장, 디지털 혁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세계선거재판회의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17년 창립된 국제협의체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1부의장을 맡고 있다.

법무매거진

박상기 법무부장관

‘불법폐기물 범죄 단속 강화·엄정 대처할 것’



법조인 동정



환경부 등 정부의 합동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추진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 폐기물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달 30일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도 강조했다.

박 장관의 지시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정부부처 합동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지난 달 29일 환경부는 불법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범정부 합동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는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체계 구축 및 상시 감시체계 강화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인용)